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	1
로컬경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	2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강원아카데미	3
江原日報 21면	국내 최초 여성 강력계 반장이 알려주는 경청의 자세	3
G1방송 온라인	도의회-G1방송 '제16회 강원아카데미' 개최	4
江原日報 02면	"폐광지 발전 주도할 컨트롤타워 시급"	5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형 국제학교, 공공형으로 추진해야"	6
강원도민일보 03면	굳은 표정의 신 교육감	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강원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 도정 질의	7
	너도나도 국제학교... '강원형 국제학교'로 돌파	8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	9
쿠키뉴스 온라인	강원도의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회복해야"	10
세계타임즈 온라인	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통해 교육행정 및 도...	11
메트로타임 온라인	강원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통해 교육행정 및...	12
	강릉 "옥계항만 키운다", 동해 "중북 경쟁 제살 깎아먹기"	13
	공공의료 어려움 심각...강원도 대책 추궁	14
	(기획) '연 운영비 1800억원' 강원테크노파크의 충격 실태[...	15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정질문 나선 도의원, 부적절 언행 논란... "진심으로 사과"	16
江原日報 02면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16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엄윤순(인제)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심영곤(삼척) 도의원	17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이현종(원주) 철원군수·김정수(철원) 도의원	17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삼척)	17
강원도민일보 01면	도·정치권 공조 '난기류' 강특별법 혐로 걷나	18
강원도민일보 02면	서울 찍고 부산...외국인 100명 중 4명만 강원 찾았다	18
강원도민일보 02면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구간 착공 2031년 준공	19
강원도민일보 04면	"상세사유 쓰고 진위 확인해라" 일선 교원 연가 논란	19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 "초등 평가계획 현장 의견 수렴"... 교사노조 "환...	20
江原日報	01면	강릉아산병원 도내 첫 '진료 섯다운' 수순	20
江原日報	01면	아기 울음소리 끊긴 강원 ... 2월 출생 '571명' 역대 최소	21
江原日報	02면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착수 ... 관건은 GTX-B춘천 사업비 ...	21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구축 '맞손'	22
강원도민일보	11면	원주한지문화제 25년 만에 강원감영서 개최	22
강원도민일보	12면	'안목해변 한눈에'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23
江原日報	04면	도내 학생들 카이스트 영재교육 받는다	23
江原日報	04면	봄인데 ... 맑은 하늘을 못 보네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기형적 선거구 뜯어고쳐야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대 의대 지역사회 기대 부응하길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대학병원 휴진·수술 중단, 환자 절규 안 들리나	27
江原日報	19면	[사설] 경기 불황·물가 폭등, 지금 공공요금 인상할 때가	28

2024 04 24 ()

 전국 지방자치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실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4월 25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당면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의장단은 지난 3월부터 도 출자 및 출연기관과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등 12곳을 순회방문 한 바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일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망상1지구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망상1지구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단체 등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과 취하를 반복하여 강원경자청에서는 경찰에 수사요청을 한 바 있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사업자 지정 취소, 행정의 오류 등 많은 부침이 있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지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호 기자 it8815@naver.com

2024 04 24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실시

로컬경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 강원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실시

[로컬경기=로컬경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은 4월 25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당면 현안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 계획이다

의장단은 지난 3월부터 도 출자 및 출연기관과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등 12곳을 순회방문 한 바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일정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망상1지구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망상1지구는 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단체 등이 불법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과 취하를 반복하여 강원경자청에서는 경찰에 수사요청을 한 바 있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그동안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사업자 지정 취소, 행정의 오류 등 많은 부침이 있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지구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22



도의회 강원아카데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권혁열 도의장, 한창수 부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강원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경찰 출신 박미옥 작가가 초청돼 강연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4 04 25 ()

21

국내 최초 여성 강력계 반장이 알려주는 경청의 자세

도의회 강원아카데미
박미옥 전 형사강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16회 강원아카데미가 2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4일 한국 최초 여성 강력계 반장으로 알려진 박미옥 전 형사를 초청, 제16회 강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 인정해 드립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 전 형사는 자신의 경험과 범죄 현장 뒷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돌연 경찰 조직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러면

서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이 인간 지성의 최고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제

대로 본다는 것은 규정짓지 않는 것”이라면서 “저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라고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살인 사건에서 모두를 정신차리게 해 준 것은

‘눈물자국이 흐르는 방향이 다르다’는(팀) 막내의 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 서울 강남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해수 주연의 드라마 ‘시그널’, 고현정 주연의 드라마 ‘히트’ 등 수많은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원일보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 강원경제인단체연합회 등이 매월 개최하고 있는 도의회 강원아카데미는 간편한 식사를 곁들이는 ‘브라운백포럼’ 방식으로 열리고 있으며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현정기자

2024 04 24 ()

G1방송

도의회-G1방송 '제16회 강원아카데미' 개최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강원자치도의회와 G1방송이 국내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원아카데미 열여섯 번째 행사가 오늘(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박미옥 작가가 '인정받고 싶어 인정해드립니다'를 주제로,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로서 겪은 경험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열리는 강원아카데미는 사전 접수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江原日報

2024 04 25 ()

02

“폐광지 발전 주도할 컨트롤타워 시급”

도의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

폐광지역 전반을 아우르며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대표 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통해 제기됐다.

이한영(국민의힘·태백) 의원은 24일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한 달여 후 태백 장성광업소가 폐광한다”며 “하지만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각종 대체산업이 펼쳐져 왔음에도 폐광지역은 낙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2010년과 비교해 2022년 사업체 수와 종사자 비율도 줄어 들었다”며 “이는 중심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 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탄광지역 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우영 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기금을 조성해서 폐광지역 4개 시·군에 2001년부터 투자한 금액이 1조7,000억원 정도 되는데 지적대로 경제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2026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문가와 시민, 시·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4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3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이 김진태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신세기기자 and8729@kwnews.co.kr

이한영 도의원 “도 산하 경제개발센터, 탄광지역내 설치해야”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정상화 촉구… 공공형 국제학교 제안도

이날 강정호(국민의힘·속초) 의원은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조치를 해줬고, 원상 회복을 이뤄서는 안 된다”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다시 민간업자로 넘어

가게 돼 북방항로 재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지난해 재개된 속초~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북방항로 역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길선(국민의힘·원주) 교육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

분한 인력,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될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순옥(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청년의 고립·은둔 증가 현상을 개인 일탈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강원자치도도 선제적으로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최두원기자

2024 04 25 ()
03

강원도민일보

“강원형 국제학교, 공공형으로 추진해야”

임시회 도교육청 행정질의회서 제안
“재정상 어렵지만 신중 검토” 답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문화 학생들에게도 개방되는 공공형 국제학교 모델안이 제안됐다.

2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박길선(원주) 의원은 “3차 개정 시 포함될 강원형 국제학교는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해야 한다. 다문화 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내국인 학생들에게도 국제학교를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길선 이한영



강정호 유순옥

이어 “국제학교는 수업료가 비싸고 고소득층 자녀들의 스펙용 학교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원형 국제학교는 높은 수업료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재정 상태 등을 봤을 때 공공형 국제학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공공형에 준

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폐기금을 법이 정한 배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도 자체 기준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며 “규모, 인구 등이 반영된 기준이 아니어서 지역 불균형,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시군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배분기

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현안에 대해 지적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최대한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이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해서도 “소유권이 민간업자로 넘어가 속초의 북방항로 재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조속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순옥(비례) 의원은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을 특정해 지원하는 청년 미래 센터 사업 공모에 일상돌봄 서비스와의 중복으로 미지원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청년들이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호

2024 04 25 ()
03

강원도민일보



굳은 표정의 신 교육감 2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박길선 의원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김정호

2024 04 25 ()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자치도의회 이한영 의원 도정
질의

24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327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김진태 지사에게 예산 편성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24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327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김진태 지사에게 예산 편성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24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327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김진태 지사에게 예산 편성에 관해 질의 후 도의회의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24일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열린 327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한영(국민의힘.태백) 김진태 지사에게 예산 편성에 관해 질의 후 도의회의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있다.

2024 04 24 ()

KBS 춘천

너도나도 국제 학교... '강원형 국제 학교'로 돌파



[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반이 되는 자치도법은 벌써 두 번이나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국제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 특례는 빠진 상탭데요.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8년 전 국내 최초 특별광역시자치단체로 출범한 제주도.

국제 학교가 있는 영어교육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최대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인구 유입과 한 해 2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 때문입니다.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에서 국제 학교 설립 특례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난 법 개정 과정에선 무산됐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길선/강원도의원 : "지난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국제 학교 허가 특례가 빠진 것도 교육부의 반대가 주요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한 '강원형 국제 학교'로 교육부를 설득하자는 겁니다.

[권명월/강원도교육청 정책국장 :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적극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아이들도 국제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문제는 지역 간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부산과 인천, 전북자치도 등이 국제 학교 설립에 도전장을 낸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초 출범한 전북자치도는 강원도와 닮은 점이 많아 걱정입니다.

'새만금 국제 학교'에 '케이팝 국제 학교'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김상영/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전북하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국제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부 경쟁도 부담입니다.

현재 국제 학교 유치에 나선 강원도 내 시군이 7곳이나 돼 지역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박성은

2024 04 24 ()

G1방송

강원자치도 "속초 연안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수년째 준공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정상화에 강원자치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강원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강정호 의원은 "민간 사업자에 최 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을 해 줬기때문에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선 안 된다"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 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원상회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4 04 24 ()

강원도의회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원상회복 해야”

하중천

도, “행정처분 마무리 후 원상회복 조치할 것”



강정호 강원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강정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의원은 24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한 정책과 집행들이 큰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며 “잘못된 실수와 결정이 있다면 과감히 바로 잡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의 행정처분을 마무리해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2024 04 24 ()

세계타임즈

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통해 교육행정 및 도정전반에 대한 대안 제시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국민의힘, 원주1)은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전반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포함될 ‘강원형 국제학교’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강원형 국제학교를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특례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추진됐으나, 교육부 반대로 인해 결국 불발되어, 이번 3차 개정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원주부론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신청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R&D 투자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관리채무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언급하며, 긴축재정 기조 유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국비를 최대로 확보 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확보한 국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길선 위원장의 제언에 대해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 동감하며, 국비와 지방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04 24 ()

강원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통해 교육행정 및 도정전반에 대한 대안 제시

국제학교 설립,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 도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제언

서규식 기자



강원도의회 박길선 교육위원장, 도정질문 통해 교육행정 및 도정전반에 대한 대안 제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국민의힘, 원주1)은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전반에 관련해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시 포함될 ‘강원형 국제학교’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강원형 국제학교를 공공형 국제학교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특례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당시 추진됐으나, 교육부 반대로 인해 결국 불발되어, 이번 3차 개정에서 재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원주부문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신청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하며,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R&D 투자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관리채무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언급하며, 긴축재정 기초 유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국비를 최대로 확보 성과에 대해 격려하며, 확보한 국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길선 위원장의 제언에 대해 이희열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 동감하며, 국비와 지방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트로타임즈 서규식 기자 metro-times@daum.net

2024 04 24 ()

MBC 강원영동

강릉 "옥계항만 키운다", 동해 "중복 경쟁 제살 깎아먹기"

홍한표

컨테이너선 국제 항로 운영을 놓고 동해시와 강릉시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물동량이 아직 적고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이 심해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옥계항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류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옥계항이 환동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정기항로가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소규모 항구로 개설한 옥계항은 석탄과 시멘트 등의 화물을 주로 취급하다,

2022년 김홍규 강릉시장의 '환동해 중심 해양물류 경제도시'를 선언하며 항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을 묶은 동해·묵호항을 복합물류·수출입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컨테이너선' 화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동해신항과 연계한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확정돼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옥계항과 동해·묵호항이 수입 화물에서는 차별화돼 있지만, 수출 화물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물동량이 적어 수출 품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최재석 / 강원도의원
"경상북도 포항항에 비해서도 (물동량이) 3분의 2도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강원도가 물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더구나 두 항만 사이의 거리가 18km에 불과해 사실상 같은 권역끼리의 경쟁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두 항구의 특성화·차별화를 이루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우홍 / 강원도 해양수산국장
"저희 6개 국가항 1군데하고 지방항만 5군데는 항만 별로 특성화 전략이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항만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 항로 유지의 중장기 전략을 놓고 강원도의 고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2024 04 24 ()

KBS 춘천

공공의료 어려움 심각...강원도 대책 추궁



[앵커]

어제(23일) 열린 강원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 감소로 농촌 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한데요.

강원도는 비대면 진료와 의료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놴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1년 전부터 1주 진료 일수를 5일에서 3일로 줄였습니다.

강원도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 270여 명에서 올해 240여 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엄문섭/양구군 동면 : "매일매일 문을 열면 아주 감사하죠.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대환영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꼭 해주나요. 그건 모르죠."]

특히 농촌 지역 고령의 주민들 불편이 큼니다.

강원도 군 지역 11곳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명을 넘는 곳은 홍천군, 영월군뿐입니다.

나머지 9곳은 평균 0.7명입니다.

강원도의회에서 공공 의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우섭/강원도의원 : "주요 도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에 계신 도민께서 체감하는 의사 수는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데요."]

강원도는 비대면과 원격 진료를 확대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경희/강원도 복지보건국장 : "비전속 의료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원격 진료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의료진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원도는 지역 의료인 장학제도를 늘리고, 5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파격적으로 총 한 50억 원 정도를 금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잠시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정 질의에서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영동지역 독립재활병원 건립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최혁환

김영준 yjkim1@kbs.co.kr

2024 04 24 ()

ms투데이

(기획) '연 운영비 1800억원' 강원테크노파크의 충격 실태

진광찬 기자

'그린사이언스' 관련 실무자 징계 조치
 각종 사업 무성의 행정, 혈세 허공에
 5년새 예산 3배, 직원 2배 급속 성장
 "장기 근속 직원들 각각 떨어져" 폭로
 "직접 감사 등 대대적인 감사와 쇄신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가 방만·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 산업 육성과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2003년 설립됐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몸집을 키우면서 국비, 시·도비 등 한 해 1000억원을 웃도는 운영비를 집행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허술한 운영으로 혈세를 허공에 날린다는 지적을 받으며 도 감사 단골손님으로 불려 다닌다. MS투데이의 강원테크노파크의 미진한 사업 실적과 방만 운영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한 태백 소재 그린사이언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강원 '미래 산업의 꿈' 물거품 되나? 플라즈마 공장 경매로 참조)으로 시작된 자체 감사에 따른 조치다. 이 업체는 사업을 위한 장비 구매 명목으로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로부터 보조금 18억원을 받았지만, 현재 경영 악화로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도 감사위는 최 전 지사 수사외의와 함께 이 사업을 주관한 강원TP 실무자에게 중징계·경징계를 내렸다. 당초 그린사이언스 측에서 이행보증증권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사업 기간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강원TP는 이행보증증권을 연장하지 않은 채 사업 기간만 늘렸다. 이후 그린사이언스의 경영 부실이 드러났고 보증기간 외 보험사고로 보조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강원TP가 지원 기업에 대해 경영 평가와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혈세 18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강원TP의 안일한 행정은 200억원 규모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자격 박탈까지 초래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 방만·부실 운영에 따른 잦은 혈세 낭비

강원TP는 2003년 설립된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역산업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고 지역혁신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나 강원자치도, 도내 시·군과 사업 매칭을 통해 예산을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올해 본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1800억원(전년도 이월금 984억원 포함)을 웃돈다. 국민의힘 이한영(태백) 강원자치도 의원은 "강원TP가 그린사이언스 사업을 주관하면서 컨설팅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을 제대로 했다면 그린사이언스와 200억짜리 R&D사업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에서 출자·출연 기관을 두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없는 행정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기 위해 서인데, 현재 강원TP는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따먹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강원TP의 방만 운영과 전문성 결여로 혈세를 날린 사례는 그린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다. 앞서 '액화수소 드론 택시(UAM) 시제기 개발 지원 사업'에서도 강원TP의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으로 수십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202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지난해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원TP가 이 사업을 전담할 수 도권 소재 업체를 부적절하게 선정하고 도비 131억원을 집행하면서 보험증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다는 게 도 감사위 설명이다. 도는 전액 환수 방침을 내세웠지만, 최소 20억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감사위는 당시 김성원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센터에 입주한 기업 재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업무를 소홀히 해 재정을 낭비한 사례도 있다.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처분요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테크노파크 소속 한 센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입주 기업의 임대차 계약을 소홀히 해 77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해당 기업이 직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주기업심의위원회를 건너뛴 채 입주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을 연장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2024 04 25 ()

강원도민일보

02

도정질문 나선 도의원, 부적절 언행 논란...“진심으로 사과”

실시간 생중계 비판 여론 들끓어
도청 노조 항의 방문 등 강경대응

강원도의회도정질문에 나선 도의원이 도청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A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치른 세계잼버리수련장 부지 관리 등에 대해 질의에 나섰고 B국장이 답변을 하던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 A도 의원은 B국장에게 “옛날 콩까먹는 소리하지 마시고”라며 해당 국장의 발언을 차단했다.

또 다른 국장들의 현안 설명에 대해서도 해당 도의원은 “하라고 할 때 안하

고, 이제 와서 설치니까 지금 문제”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의회도정질문은 실시간 생중계로 중계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도의원의 부적절 발언 등에 대해 도청 자유게시판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의회를 항의방문해 권혁열 의장에게 해당 의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도청 노조도 이날 해당 도의원을 항의 방문했다.

A도 의원은 이날 도의회 게시판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A도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상심하셨을 공직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방언으로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지,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등의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심예섭·이정호

2024 04 25 ()

江原日報

02

“콩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

도의원, 도 국장에 막말 논란
직원 등 반발 잇따르자 사과

강원도의회이 도정질문 중 도청 국장을 향해 ‘콩 까먹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 24일 강원도청 직원들이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도의원은 지역 방언이라면서도 오해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다.

A도 의원은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던 중 도청 국장의 답변을 막고 “옛날 그 콩 까먹는 소리·말씀하지 마시고,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현재를 보자는 이야기”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도청 자유게시판에는 ‘막말이다’, ‘의원이라고 공무원을 하 대하는 행동은 고쳐야 한다’는 등 질타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잇따랐다.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가 24일 권혁열 의장을 찾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신성호 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도 이날 해당 도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과를 요구했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해당 의원은 이날 도청 게시판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상심하셨을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발언은 지역 방언으로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폄하 의미는 없었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본보에도 “과거 직업상의 이유로 목소리 톤이 높은 데다가 방언을 썼을 뿐 감질을 하려던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죄송하다. 앞으로 말을 더 걸러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15
엄윤순(인제) 도의원은 25일 오후 2시 인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어울림한글대회에 참석한다.

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어울림한글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14
심영곤(삼척) 도의원은 25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한다.

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17

의원은 25일 오후 2시 30분 철원읍 화지리에서 열리는 강원농업인력지원봉사단 발대식 및 모내기 일손돕기에 참석한다.



이현종(왼쪽) 철원군수·김정수(철원) 도

江原日報

2024 04 25 ()

21

◇심영곤도의회 운영위원장(삼척)은 25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



장(삼척)은 25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01

도·정치권 공조 '난기류' 강특법 힘로 견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도정과 도정치권 간 공조에 '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협치'가 강조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조기 개정 작업에 자칫 먹구름이 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도정치권은 오는 6월쯤 22대 총선 도내 지역구 당선인과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하는 '현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자리를 통해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비롯해 도정 각 현안 등 지역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당 간담회는 잠정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 연기 배경에는 여러 정치적 상황이 겹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6월의 경우 여야 정당별로 삼임위원회 배정이 이뤄지는 시기로, 국회 개원 일정에 따라 배정 시기는 뒤로 늦춰질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정치권은 도내 여야 의원들의 소속 삼임위가 결정된 이후, 간담회를 갖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6월 예정 현안간담회 잠정 연기
여야 삼임위 결정 후 진행 판단
강특별법 입법 방법·시기 '이전'

것으로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 다만,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 연기 배경을 놓고 도와 도정치권 안팎의 다른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도합 24선'으로 선수가 한층 높아진 도정치권과 도정 간 기싸움 분위기가 지워진다.

도정치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 5선과 4선, 3선, 재선의원을 두루 배출하면서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하게 됐다.

도정치권은 오는 7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과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와 내세우는 핵심 국정 현안인 강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론 및 추진 시기 등을 놓고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는 분위기다. 강원도 차원의 선제적인 발표와 계획에 대해 도정치권에선 '시기상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다선 의원실에선 "도지사와 현역 의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기에 앞

서 도가 추진하는 강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한다. 실무진 차원에서라도 설명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사전 교감도 없이 간담회 일정한 추진하고 발표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했다.

도정치권 일각에선 지난해 5월말 국회를 통과한 '강특별법 2차 개정안'의 성과 및 문제점 파악이 우선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2차 개정안에 담긴 각종 규정들이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먼저 비교·분석하고 보완할 부분 등을 종합해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간담회에 앞서 강원 국회의원실들을 순차적으로 방문, 3차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세밀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협의의 자리를 통해 도정치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공조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4년 전에는 9월에 했었고, 6월 간담회 개최는 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도와 도정치권 간 만남의 자리 등 선연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심예섭

강원도민일보

02

서울 찍고 부산... 외국인 100명 중 4명만 강원 찾았다

하나카드 외국인 소비동선 분석
절반 이상 2개 도시 방문 불구
수도권 내 순환... 관광상품 시급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14만명의 소비 동선을 조사한 결과 강원 지역은 100명 당 4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유인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하나카드가 발표한 방한 외국인 소비동선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가장 많이 포함된 소비지역은 서울 (8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30%), 경기 (28%) 순으로 수도권에 가장 많았고 부산 (16%), 제주 (6%)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강원은 4%에 불과해 경북 (3.4%), 대구 (3%) 등과 큰 차이를 보이

지 못했다. 특히 2개 시·도 이상을 방문하는 관광객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 (57.3%)에 달했음에도 강원지역은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 소비 동선의 상위 지역을 보면 서울 (31%), 서울→인천 (9.4%), 서울→경기 (5.3%), 경기→서울 (5%), 인천→서울 (4.6%), 인천 (3.2%) 등 수도권 내에서 순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서는 부산, 대전, 제주, 강원으로의 이동 패턴도 보였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서울·인천으로, 인천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았다.

지역간 소비 동선에서 서울이 포함되지 않는 비율은 15%에 달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방한한 외국인도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양양국제공항 등의 동선이 있음에도 강원지역 방문 비율이 저조, 지역내 관광 소비로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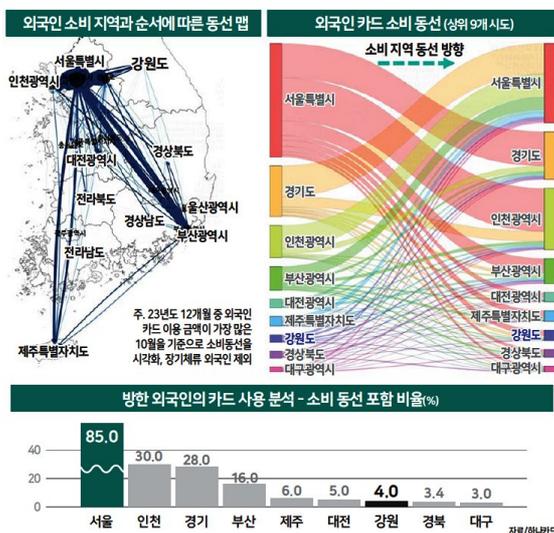
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월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입국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114만 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강원관광재단이 발표한 관광객 월별 현황에서는 같은달 강원을 방문한 외국인인 6만 6004명으로 대략 전체의 5.8% 수준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시군별로는 남이섬 등 유명 관광지가 있는 춘천이 2만 50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린 속초 (1만 5610명)가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관광 시장 외 외국인들이 강원을 찾을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업계와 손을 잡고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올해 강원 해외 전담 여행사로 선정된 35개 여행사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스키 리조트 업체 등이 참여하는 홍보 마케팅 방안 협의회를 갖고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석

02

서울 찍고 부산... 외국인 100명 중 4명만 강원 찾았다



2024 04 25 ()

강원도민일보

02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구간 착공 2031년 준공

이철규 “백복령 터널 차질없이 진행”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L=13.1km) ※ 과업 시점~종점 : 정선군 임계리~동해시 신흥동

원주국토관리청 (청장이동민)이 24일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 건설공사에 착수했다.



원주청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132억원을 들여 백두대간의 굴곡진 2차로 국도 선형을 개량한다. 공사를 통해 백복령터널 (2730m), 임계터널 (498m), 직원터널 (335m) 등 터널 3곳과 함께 교량으로 도전교 (18.1m) 1곳이 건설된다.

동해와 정선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인 국도 42호선 (백복령~달방)의 개량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국토부의 ‘국도 위험구간 계량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애초 정부안에 ‘백복령 터널’이 포함되지 않아 주민 안전과 구간 연장 단축을 위해 굴곡진 백복령 구간의 터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제21대 총선에서 백복령 구간 터널화를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1년여의 노력 끝에 국토부, 기재부 등과 협의해 2021년 8월 백복령 구간 터널화를 확정했으며, 지난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 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약 213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공사는 한신공영과 에스지건설로, 원주청은 지역업체 참여 비중을 보다 확대한 만큼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철규 의원은 “백복령 구간 터널화 사업은 주민 편의성뿐만 아니라, 동서를 잇는 교통 노선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균형발전 차원의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염원인 백복령 구간 터널화·직선화를 차질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권해민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04

“상세사유 쓰고 진위 확인해라” 일선 교원 연가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교육청, 교원 복무 유의사항 공문 시행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전달한 ‘교원 복무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놓고 현장에서 교사와 관리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연가 사용 시 구두보고와 상세한 사유 기재가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는 반면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에서는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구두 보고·상세 이유 요구 증가
교사 “고압적 통제·권위주의”
관리자 “매뉴얼 따라 원칙 처리”

원칙 제41조에 의한 연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관련 내용을 소속 교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유의사항에는 △연가 (반일연가 포함) 및 근무사항 (지각, 조퇴, 외출, 국외자출 사항 (휴가, 지각, 조퇴, 외출, 교육공무

학교장은 복무 지도·감독권자로서 소속 교원의 연가 사유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한 연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안내됐다.

이 같은 공문이 현장에서 전달된 이후 교원이 연가, 조퇴, 외출 (이하 복무) 등을 결재받으려는 과정에서 학교관리자들은 ‘개인용무’가 아닌 상세한 연가 사유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영월 A학교는 교장에 구두보고 없이 복무를 상신한 교사를 교장실로 불러내 면담을 진행했고, 강릉 B학교 역시 조퇴를 내 교사에게 “사유를 자세히

적으라”라며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태백 C학교의 경우 ‘개인용무’로 인한 조퇴를 금지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진행한 설문에 접수된 민원 사례만 280여 건에 달한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매우 고압적으로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굳이 복무 상신 때마다 구두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권위주의”이라 했고,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전교조는 공문철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라 지적했다.

반면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들은

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춘천 D학교 교장은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안내한 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천 E학교 교장 역시 “학기중 교사 개인의 무분별한 조퇴와 연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교와 아이들을 배려해달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은 관리자 연수 등의 자리를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복무관리 시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문은 교육부 지침과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정민영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04

도교육청 “초등 평가계획 현장 의견 수렴”... 교사노조 “환영”

생평가 기본계획에 현장의견을 반영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민엽

속보=강원도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평가하도록 안내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방침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천막농성을 이어 오던 강원교사노조(본지 2월1일자 웹 등)가 도교육청과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양측은 올해까지는 현재 계획을 유지하되 앞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학생평가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

도교육감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 이를 위해 선생님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고 내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날 강원교사노조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적 목표에 공감하지만, 학생평가 기본계획은 평가에 대한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면서 “학

2024 04 25 ()

江原日報

01

강릉아산병원 도내 첫 ‘진료 셋다운’ 수순

울산의대 비대위 주 1회 휴진 결정 ... 강릉 전임의 88명 포함 내달 3일부터 돌입·장기 육아휴직 전방 ... 병원 대책 마련 고심 원주기독병원도 검토 중 ... 강원대 의대 교수진은 오늘 논의

는 “이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전체 병상의 약 10%를 축소 운영하고 있고 수술도 40%가량 축소된 상태”라며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들과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의료진이 피로 누적에 호소함에 따라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면 휴진을 해도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에 대한 진

료는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 이탈로 인해 불편을 겪어 온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24일 골다공증 검사로 류마티스 내과를 찾은 김모(78)씨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초로 진료일정을 잡았는데 휴여 취소되거나 변동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혼자 거동이 힘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오는데 휴가 등을 바꿔야 할 수 있으니 미안한 마음도 크다”고 걱정했다. 류호준·강동휘·김인규기자

속보=강릉아산병원이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내달 3일 진료 셋다운(본보 24일자 1면 보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25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주 1회 전면 휴진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도내 대학병원의 셋다운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총을 해소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료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 측은 아직까지 휴진 의사나 사직서 등을 전달한 교수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

강릉아산병원 전임의 88명이 포함된 울산의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총회에서 ‘주 1회 전면 휴진’과 ‘장기 육아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릉아산병원 전임의 등 울산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전면 휴진을 하고, 최대 2년까지의 장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과 업무 과다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이후 남은 의사들의 정신적·신체적인 피로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계속된 진료와 당직으로 인한 육아 고

2024 04 25 ()

江原日報

01

아기 울음소리 끊긴 강원... 2월 출생 '571명' 역대 최소

사망자는 사상 최다 1,216명... 자연감소 600명 처음 넘어

강원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월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5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604명보다 33명(-5.5%)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출생아 수로는 역대 최소치다. 도내 2월 출생아 수는 2013년 858명으로 1,000명 선이 붕괴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1,216명으로 역대 최대를 보였다. 1년 전보다 77명(6.8%)이나 늘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두배 가까이 많아지며 2월 자연감소 인구도 645명에 달했다. 자연감소 인구가 600명을 넘은 것은 역대 2월 중 처음이다. 2016년 6월까지 사망자 수보다 높은 그래프를 그렸던 출생아 수는 그해 7월 이후 91개월째 하향곡선을



로 감소하고 있는 점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점 등의 영향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달이던 올 2월이 지난해보다 하루가 더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 영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85세 이상 사망자가 증가하는 점이 전체 인구 자연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leekh@kwnews.co.kr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2024 04 25 ()

江原日報

02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착수... 관건은 GTX-B춘천 사업비 이전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해 현재 구상 중인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계획 반영 시 사업 추진과 국비 반영이 사실상 확정된다. 하지만

국토부 지자체 설명회... 운행편수 감축 검토 촉각 GTX-B 춘천 연장 사업비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와 최종 사업규모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대전 국

가철도공단 사옥에서 '광역철도의 미래' 세미나를 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를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5월 중 전국 지자체로부터 5차 국가철도망 반영 후보군 사업을 건의받을 계획이다. 대상 사업은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등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등이 건의 대상이다. 춘천시와 가평군은 지난해 완료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GTX-B 총 사

업을 4,238억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시 강원도와 춘천시, 가평군 등이 1,300억원을 분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GTX 통합기획용역 결과 산출된 총사업비는 춘천시 추산 사업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편수를 감축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운행편수를 줄일 경우 GTX 개통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5월 국가철도망 계획 광역철도 사업으로 건의해 재정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GTX-B 사업비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춘천형 교육발전특구 모델 구축 '맞손'

시범지역 지정 기념행사 열려
시·시의회·교육지원청·대학
지역자원 활용 교육도시 협력

춘천시와 춘천시의회, 춘천교육지원청, 지역 내 각 대학이 춘천형 교육모델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춘천시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기념행사가 24일 오후 시청 호반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춘천지정을 축하하고, 교육발전특구 춘천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다.

교육발전특구는 자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춘천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시범지역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춘천시 교육발전특구 모델은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 생애 전주기 교육협력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를 교육도시화'다. 이를 위해서는 지



춘천시가 마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기념행사가 24일 오후 시청 호반광장에서 육동한 시장, 김진호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과 각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역인재 정주와 교육생태계 혁신,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거버넌스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이날 참석자들은 춘천형 교육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의 가장 큰 보물인 아이들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교육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진호 춘천시장장은 "춘천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지역

발전기에 기여하고 지역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춘천교육지원청도 각고의 노력을 함께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특구시범지역 지정은 여러가지 교육적 정책을 추진할 모멘텀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

들어가자"고 했다.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교육은 멀리보고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기쁘고 춘천교대도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영식 한림성심대 총장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축하하고 한림성심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왕덕양 송곡대 총장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돼 기쁘고 송곡대도 협력하겠다"고 했으며 이덕수 한국폴리텍대Ⅲ 대학장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춘천시교육도시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지역역 기반한 미래형 교육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춘천만의 교육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고영선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과 최수진 교육부 자치협력과장, 김승희 강원대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원주한지문화제 25년 만에 강원감영서 개최

테마파크 공사 일정·장소 변경
원일로 빈상가 갤러리 운영 등
구도심 특성 적극 활용 9월 개막

원주한지문화제가 25년만에 첫 개최
지인 강원감영 일대에서 펼쳐진다.

한지개발원은 최근 한지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데 이어 올해 원주한지문화제를 오는 9월 구도심 중

심지인 강원감영 일대에서 개최키로 했다.

원주한지문화제는 매년 5월 신도심 무실동 한지테마파크에서 진행해 왔으나 최근 테마파크 내부 공사로 불가피하게 올해 개최 장소와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올해 세부 개최 장소는 강원감영~자유시장 사거리 구간이다. 원주대표 구도심이자 제1회 축제 개최지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찾아가 합

께 호흡하는 축제 초심을 되살리는 동시에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특히 원일로 A·B도로 일대 빈상가를 활용해 한지 공예를 선보이는 팝업 갤러리 운영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개최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축제 세부 계획도 마련 중이다.

김진희 한지문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축제는 강원감영, 원일로, 지하상가 등 구도심 중심가의 특성을 적

극연계활용할 계획"이라며 "첫 개최 당시 설렘과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 새로운 한지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원주한지문화제는 지난 1999년 9월 강원감영에서 개최됐다. 이후 협소한 공간 등을 고려해 지역예술관, 종합운동장으로 개최 무대를 변경했다. 이어 축제 위상이 높아지며 원주시가 건립한 한지테마파크에서 축제를 이어왔다. 강주영

‘안목해변 한눈에’ 죽도봉 스카이벨리 조성

연간 수백만명 찾는 강릉 명소
국내 스카이워크 중 최고 높이
시, 의견수렴 거쳐 8월 착공

강릉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의 ‘죽도봉’ 일대에 국내 최고 높이의 스카이워크 관광지가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견소동 11-1번지 안목 죽도봉에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죽도봉

스카이 벨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스카이벨리는 길이 200m, 높이 30m로 바다로 향하는 국내 스카이워크 중 가장 높은 규모다.

안목의 죽도봉은 바다와 가까운 봉우리에 대나무가 많다는 뜻에서 죽도봉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정상은 해발 30여 m에 불과할 정도로 야트막한 봉우리다.

죽도봉 인근에는 강릉지역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안목커피거리’가 위

치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또 죽도봉 인근에서 슬라임바람다리를 건너면 남향진 해변과 연결돼 관광지가 확대된다.

시는 죽도봉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기 위해 지반조사를 마치고 특정공법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오는 5월 초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항개발사업 등 관련 인허가를 거쳐 오는 8월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죽도봉에 스카이워크가 조성되면 인근 하늘을 나는 자전거, 짚라인 등과 연계돼 관광객들이 해안에서 스텝넘치는 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해안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관광객들이 안목과 남향진을 오가며 산책과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2024 04 25 ()

江原日報

04

도내 학생들 카이스트 영재교육 받는다

도교육청, 온라인 위탁 운영 추진
내년부터 초·중생 100명 내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온라인 영재교육원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강원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카이스트 측과 ‘교육청 위탁 사이버영재교육’을 2025학년도부터 진행하기로 협의 중이다.

카이스트의 사이버영재교육은 시간, 공간, 경제적 이유로 영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전문 강사진의 고품질 영재교육을 제공한다. 강원지역에서 카이스트 영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역적

제약으로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던 학생들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카이스트에서 운영하는 수학, 과학교육에 더해 강원지역에서는 ‘정보’ 분야 교육이 추가된다. 선발 인원은 초교 고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5개 학급에서 학급별 20명씩 총 100명 내외가 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카이스트 사이버영재원이 운영되면 기존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던 일부 영재교육원은 점차 폐원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강생이 1~2명에 불과해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소규모 영재교육원이 수강생 급감으로 더는 운영이 어려워 온라인 영재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휘기자 yulnyo@

봄인데 ... 맑은 하늘을 못 보네

4월 들어 황사와 비가 반복되며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봄'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 동안 강릉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던 날은 5일에 불과했다. 나머지 10일은 비가 오거나 황사로 인해 뿌연 하늘을 봐야 했다. 같은 기간 춘천에서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던 날은 6일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 14일 정선 최고기온이 32.2도까지 오르며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이상고온 현상도 나타났다. 이날 북춘천과 철원의 수은주는 30.6도와 29.9로 역대 4

이달 '비 그치면 황사' 반복 보름간 맑은 하늘 5~6일뿐 '정선 32도' 4월 역대 최고도 "이상기후 재난 대응책 필요"

월 최고기온을 보였다. 태백지역 역시 15일 아침 최저기온이 13도를 기록, 4월 관측된 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다. 15일 춘천에는 시간당 최대 12.7mm의 봄비가 쏟아지며 4월 중순 시간당 최대강수량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4일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 내린 비가 그쳐도 25일 맑은 하늘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내몽골 일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25일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영상 8도, 춘천 9도, 원주 11도, 강릉 12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는 기온이 급격히 올라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다. 일교

차는 최대 18도까지 벌어지겠다.

전문가들은 도내에서 폭염과 열대야, 강한 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자체 발간한 보고서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영향'을 통해 "극한기후 현상은 가족의 질병 발생 및 폐사 등으로 이어지며, 영동 지역의 해수면 수온 상승은 어종 및 어획량 변화로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 관리를 위한 수자원 모니터링, 유역개념의 물 관리, 남과 북의 공동 수자원 관리 등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 19

기형적 선거구 뜯어고쳐야

-지역 특성 무시한 '짜깁기식 획정' 개선 기회

강원도 정치권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를 합리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역 정서와 현안이 상이한 지역을 한데 묶어 민의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정치권과 도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선거구가 고착해, 주민들의 불만을 부르는 정치 현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짜깁기' 식으로 획정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선거구 조정 움직임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돼 기대가 높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을 예정입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허 의원은 '춘천 단독 분구' 실현과 함께 도내 연쇄적인 선거구 조정 피해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중 시와 군이 한데 묶이거나 군 지역으로만 구성된 복합선거구는 4곳입니다. 지역마다 때

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수부 도시 춘천마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이라는 이상한 선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더구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는 춘천 지역 19개 읍면동으로만 구성됐음에도, 춘천 외 3개 지역 이름표가 따라붙습니다.

강원 선거구는 역대 선거 때마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선 홍천이 북부 접경지역에, 횡성이 영서 남부 지역에 흡수되면서 5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복합선거구가 도내에서만 2곳이 탄생했습니다. 인제의 경우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줄곧 미시령을 넘나들며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태백·정선 등 폐광지역 선거구도 수시로 변화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하면 농산어촌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인구수에 근거한 획일적 획정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선거구를 획정하는 악순환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도내 중진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강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선거구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4 25 ()

/ 19

강원대 의대 지역사회 기대 부응하길

-의사 및 의료여건 서울과 천양지판... '미니의대' 탈피해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제(4월 23일) 오는 30일 진료 중단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의 집단적 수련병원 이탈로 2개월 계속된 근무 피로도 와 암울한 의료공백사태로 소모된 심신을 회복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주 1회 휴진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적 이유가 있기는 하나, 의료공백의 구멍이 커져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대 위상을 고려할 때 국립대를 비롯한 전체 의대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원지역의 만성적 구인난과 같은 의료계 문제 및 강원대 의대의 여건은 서울이나 서울대의 대와는 사정이 천양지판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3월 정부에서 늘어난 정원 2000명에 대해 강원과 같은 비수도권에 82%인 1639명을 배분했습니다. 나머지 361명은 경기와 인천에 배정됐고, 서울은 0명이라는 점에서 이번 증원 배경이 부실한 비수도권 의료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 출신 신입생 선발 비율을 대폭 올려 그 지역에서 중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이 해당 지역 의대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도내 학생

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학생이 출신지를 떠나 더 멀리 유학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교육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어서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더욱이 강원대의대 정원은 49명에 불과해 제주대와 함께 일명 '미니의대'로 불립니다. 강원대병원을 규모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교육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었기에 이번 증원은 과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획기적인 계기입니다. 공공의료와 연계 상생해야 할 국립대병원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강원대의대나 의대교수 입장으로는 반대가 능사여서는 안 됩니다.

유념할 점은 더 있습니다. 증원에 따른 의대별 대응에서 비수도권과 서울, 비수도권 중에서도 지역대학에 따라 온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증원을 미루는데 동의하지 않는 의대도 엄연히 있습니다. 경북대와 전남대 등의 국립대는 강원대와 달리 의대비대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 다. 이미 증원 준비에 들어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실사구시'의 길에 충실해야 강원대 의대에서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江原日報

2024 04 25 ()

/ 19

대학병원 휴진·수술 중단, 환자 절규 안 들리나

강원대 등 전국 20여개 의과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총회를 열어 1주일에 하루는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충남과 세종 등 일부 대학 비대위는 휴진을 결정했다. 강원지역 대학병원들은 휴진 등을 정하지 않았지만 휴진 및 수술 중단이 확산될 경우 환자들의 피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대 증원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도내 대학병원들은 외래진료를 일부 축소하는 상황이다. 강원대병원도 정신과와 정형외과 병동 일부를 감축 운영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도 전체 병동의 약 10%를 축소 운영하고 있다. 23일 기준 도내 대학병원 병상가동률은 45%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되는 25일 이후에는 의료 대란이 한층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높다. 두 달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사직서 효력 발생 이후에는 진료 축소 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의협 등은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지원 등 광범위한 의료개혁 방안을 다룰 기구인데도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이익을 관찰하려는 의사집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 한시가 급한 중증 환자들은 안절부절이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종용해도 모자랄 판에 외래진료와 수술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오히려 사직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모습에 깊은 탄식이 나온다.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잇그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선 말기 암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절규가 의대 교수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의 반감을 사는 의사가 아닌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설득하고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을 해소해 주는 의사로 속히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江原日報

2024 04 25 ()

/ 19

경기 불황·물가 폭등, 지금 공공요금 인상할 땐가

물가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다. 특히 식료품, 공산품, 기름값 등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까지 불거지고 있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1년간 동결되었던 가스 요금이 공급비 조정을 앞두고 인상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또 수도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세 차례 뛰었고, 지난해 5월 추가 인상된 이후 1년째 동결 상태다. 지난해 초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인상을 억제해 온 것이다.

상하수도 요금 또한 오르며 서민 경제를 압박하게 하고 있다. 춘천시도 지난해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톤당 가정용 70~290원, 일반용 180~510원, 대중탕용 170~230원 인상했다. 전용공업용은 상수 120원, 하수 160원을 각각 올렸다. 가스 요금과 수도 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정된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이나 고정소득층에게 고정적인 공공요금의 인상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가스나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용의 증가는 가계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가스나 수도 요금의 인상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

어 가계 경제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킨다. 이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들의 매출 감소와 고용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가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가격 상승을 제어하고 소비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생활필수품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

1년 동결됐던 가스 요금 인상 ‘초읽기’

“시·군 수도 요금도 들먹, 저소득층 가계 부담 일정 기준 이하 할인하는 제도 도입을”

다. 더불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생활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고정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즉, 이들을 위해 급여 및 복지 혜택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생활 및 주거 보조금, 어린이 수당 등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공공요금에 대한 무료 또는 할인된 서비스 제공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고정소득층에게는 가스, 전기, 수도 등의 요금을 일정 기준 이하로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이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